

국책은행이 뒷골목 양아치 짓

한국수출입은행, 성동조선 14척 수주계약 막고 청산 몰아...7일,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아래 수출입은행) 앞에서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STX조선지회 조합원 등 800여 명이 상경해 수출입은행의 수주 방해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성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성동조선이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근거와 기준 공개 없이 발표한 실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기성 지회장은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수주 영업 활동까지 방해했다. 14척의 수주 가능 물량이 있지만, 수출입은행이 계약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국책은행의 갑질과 횡포를 넘어 노동자 삶과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조선은 12월까지 네 개 선사로부터 선박 열 네 척의 수주의향서를 받았다. 모든 물량은 시장선가 이상으로 협의해 저가수주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계약 진척을 막고 있다. 열 네 척 가운데 네 척은 12월 중순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중국조선소로 계약이 넘어간다.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일감부족으로 순환휴직 중이다. 성동조



선 노동자 90%가 휴업, 휴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을 청산이나 인적 구조조정으로 몰기 위해 수주 계약을 가로막고, 끼어맞추기 식 실사로 청산가치를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들은 STX조선에 선박 수주를 위한 RG 발급을 제한하며, 전체 노동자 30%를 내보내는 구조조정안을 강요했다. 채권은행들이 중형조선소의 어려움을 부각하며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다. 책임을 떠안고 산업과

기업을 살리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주 활동을 방해하는 수출입은행의 반기업 행태와 국민을 생각 않는 정책금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투쟁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대선 때 찾아와서 조선산업 살리겠다고 입을 모으더니, 당선 뒤 아무 답이 없다”라며 “박근혜 정권도 조선소 노동자 인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조선산업 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결의대회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출입은행의 수주방해 행태를 폭로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아무 근거 없이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실사 결과를 낸 회계법인에 대해 법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 조합원 800여 명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한국수출입은행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책은행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지회는 매주 상경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중형조선소 지원을 비롯한 조선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지회는 수출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목록부담. 국회, 자본 눈치 근기법 개악 시도

노조 할 권리 5대 요구 수용,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해야



민주노총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 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조속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12월 임시 국회 회기 동안 노동관계법 개악에 나서면 즉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주 68시간 노동 허용하는 엉터리 행정해석 폐기, 특례업종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5대 우선 요구로 내놨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9월 28일 5대 요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목록부담이다. 쫓겨나 정부를 자임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은 편법과 꿈수로 누더기가 됐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언제 할 건지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에 간사가 근로기준법 개악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몰아가는 행위다”라며 “20대 국회가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원하면 노동약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국회에 경고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만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이 자본가의 노조 탄압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며 “자본은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창구단일화 제도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제도 폐지 방안을 밝히고 법안을 제출했다”라며 “국회가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에 화답해

모든 국민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동근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장은 사측이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상 노조를 만들 수 없다’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동자를 내쫓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을 갈취하고 있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국회가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탄압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원상회복하고,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은 외면하고, 자본의 이해를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악에 매달리는 국회를 적폐라 규정하고, 국회 모형을 몽둥이로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11월 23일부터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12월 8일까지 벌였다.